



주간통일정세 2014-24(2014.06.16~06.2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2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잇단 동해함대 시찰...이번엔 잠수함부대(6/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잠수함 부대인 제16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수중 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 등 다양한 실내 훈련을 참관한 뒤 748호 잠수함에 승선해 실제 훈련을 점검하고 항해술 등도 직접 지도함.
 - 이어 "모든 해병을 만능 해병으로 준비시켜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강조하고 "해병들이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셔도 당과 혁명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일 '黨사업' 시작 50주년 맞아 노동당 부각(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1면에서 "장군님(김정일)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각지 당조직에서는 장군님의 당 건설 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 있다"라며 모범적인 당조직 간부들의 출선수범과 헌신을 대적으로 소개함.
 - 신문은 2면에 실은 '무궁토록 빛나라 조선노동당기여란' 제목의 글에서는 김 위원장의 당사업 시작일(6월 19일)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과 나란히 "노동당 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행운의 날, 영광의 날"이라고 치켜세움.

- **北, 김정일 당사업 시작 중앙보고대회...김정은 참석(6/1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8일 녹음실황 중계를 통해 중앙보고대회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김 제1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정일 '黨사업' 50주년...北 "인민 이익 최우선" 강조(6/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1면에 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전당과 온 사회에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이 차넘치게 하려고 한다"며 "모든 당조직과 일꾼들은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절대시하고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군중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 풀어줘야 한다"고 주문함.



- **北, 내각 부총리에 '남북회담' 참여 최영건 임명(6/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영건을 부총리에 임명하는 '정령'(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올해 62세인 최영건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안남도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금속공업부 책임지도원, 건설건설공업성 국장을 거쳐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건설공업성 부상을 지냄.

- **北 김정은, 과학자 주택 건설현장서 "품질 보장" 강조(6/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과학자 주택단지인 평양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현장과 능라도의 5월1일경기장 개보수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현장을 찾은 김 제1위원장은 "놀라운 건설 속도가 창조되고 있다"고 만족을 표시하며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것을 독려했으며, 장마철 전까지 나무 심기와 산책길 조성 등을 마무리하고 대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온실과 주택 사이에 각자가 재배해 소비할 수 있는 개인 텃밭을 만들라고 지시함.

- **처형설 들었던 리수용 北 외상, 스위스 방문(6/20, 르 텅(Le Temps))**
 - 스위스 일간지 '르 텅'(Le Temps)은 리수용 북한 외상이 오는 27일 스위스 베른에서 이브 로시에 스위스 외무차관을 예방한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르 텅에 따르면 스위스 외교부는 리수용 외상의 로시 외무차관 예방 사실을 확인하고, 리 외상은 개인적 이유로 스위스를 방문하며 스위스는 북한과 정기적으로 정치 대화를 갖는 등 정상적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힘.

- **北, '張속칭'으로 공식 된 말레이시아 대사 임명(6/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에 강철이 임명됐다고 보도함.

■ 김정은 동향

- 6/18, 김정일 당 사업 개시 5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6월 18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4.25문화회관 진행(6.18,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6/20, 김정은 黨 제1비서,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장과 5월1일경기장 개건현장 현지지도(6.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기타(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 현지요해(6.16, 중앙통신)
 - 총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에서 집짐승 수를 늘리고 축산물 생산을 활성화하려면 축산연구소와 수의방역소 건설을 선행시켜 완공하여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일 저작(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발표(6.19) 17주년 즈음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림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로 전진시켜 왔다'고 호도(6.17,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당 사업 개시 50주년을 맞아 '김정일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로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걸출한 정치가'라고 칭송하고 '김정은 영도따라 김정일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강성국가 건설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고 호소(6.19,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당 사업 개시 50주년(64.6.19) 기념 행사

-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6월 19일 김영남·박봉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모란봉극장에서 진행(6.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당 사업 개시 50주년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군에서 진행(6.19, 중앙통신)
- 공훈국가합창단, 6월 19일 평안북도 예술극장에서 공연 진행(6.19, 중앙통신)
- 조선우표박물관, 당 사업 개시 50주년 경축 '우표집중전시'(170종 우표 4개 부문 전시) 진행(6.19, 중앙통신)
-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당을 따라 일편단심', 6월 19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6.19, 중앙통신)
-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6월 19일 각지에서 진행(6.19, 중앙통신)
-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6월 1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6.19, 중앙통신)
-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6.19, 중앙통신)
- 외국선박 선원들의 경축집회,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진행(6.19, 중앙통신·중앙방송)
- 타지키스탄 공산당 위원장, 6월 12일 김정은에게 축전(6.19,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경제

- **北, 50년 넘은 '만경봉호' 유람선 개조사업 중단(6/1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971년 취향한 화객선 '만경봉호'를 유람선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 등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중국의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만경봉호가 워낙 낡아 유람선 개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삐걱됐다"면서 "사업이 전격 중단되면서 북한이 계획했던 나진-블라디보스토크 해상관광코스 연내 개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함.
- **北, 이모작 작물 증산 위한 '과학농법' 연일 강조(6/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농업성 책임부원 류명선이 기고한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 요구'란 제목의 글을 통해 후작으로 심은 벼의 소출을 높이는 '큰모재배' 방법의 우월성을 소개함.
 - 신문은 큰모재배에서는 김이 다 자란 논이나 전작을 수확하고 난 밭을 모두 갈아엎고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칠 필요가 없으며 큰 모를 내어다 심는 시기가 해충 발생 이후여서 살충제는 모판 재배단계에서만 필요하고 따라서 살충제도 훨씬 절약된다고 설명함.
- **'제3회 북중 박람회' 10월 단둥서 개최(6/16, 단둥일보)**
 -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오는 10월 16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개막한다고 현지 매체인 단둥일보가 1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 단둥 박람회에서 총 93건, 16억 달러(약 1조 7천억원) 상당의 무역투자약서(LOI)가 체결됐다고 발표함.
- **北 노동신문 "전사회적 절약투쟁 강화해야"(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1면의 사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자'에서 황해북도 연탄군이 공장, 기업소, 학교, 협동농장 등에서 유희자재 수집함을 설치해 절약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연탄군의 경험은 모든 시, 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치켜세움.
 - 사설은 또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들고나갈야 할 애국의 기치"라고 주장함.
- **北 "올해 어황 전망 밝다"…수산업 증산 독려(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주목되는 동서해의 어황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동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1.5~2도 높다며 "이런 현상은 물고기들의 생육 조건에 좋은 영향을 줘 물고기 자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도함.



- **北 신문 "러시아의 극동개발 좋은 결과 가져올 것"(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모스크바 특파원이 쓴 '원동(극동)지역 개발에 힘을 넣고 있는 로씨야(러시아)'라는 기사에서 러시아가 올해 원유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농업, 석탄, 금속공업에 잠재력이 큰 극동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어 최근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로씨야에서 원동지역 발전에 힘을 넣게 된 것은 지금까지 서부지역 개발에만 치중한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분석함.

- **北, 외자유차경협 총괄 '대외경제성' 출범(6/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무역성에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대외경제성의 구체적인 위상과 업무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외경제성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음.

- **WFP, 대북식량지원 30% 축소... "모금 부진 탓"(6/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진행하는 영양지원 사업의 규모를 약 30% 축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WFP는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간 북한의 취약계층 240만여명을 상대로 2억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지원 예산을 6천250만 달러 축소함.

- **중국 연지-평양 관광 전세기 29일 운항 개시(6/20, 길림신문)**
 - 중국 지린(吉林)성 연벤(延邊)조선족자치주 연지(延吉)시와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오는 29일 운항을 시작한다고 길림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20일 전함.
 - 길림신문에 따르면 연벤 현지 여행사들은 평양 시내와 묘향산, 개성, 판문점, 금강산 등지를 여행하는 4~5일 전세기 관광상품을 1인당 4천 80~4천480위안(67만~73만 원)에 판매하고 있음.

- **北, 태권도 애호가 위한 전문여행사 설립(6/20,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북한 방문을 전담하는 전문여행사를 새로 설립했다고 조선신보가 20일 전함.
 - 신문은 "지난 2월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가 새로 발족해 봉사에 착수했다"라며 "여행사는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에게 조선에서의 수련, 토론회, 기술강습 등의 계기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함.



- "태국 대기업도 백두산 생수 개발 진출"(6/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백두산 생수 개발 경쟁에 태국의 대기업도 뛰어들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RFA는 이날 태국의 화교 자본인 차아 타이 그룹이 지난 7일 지린성 바이산(白山)사와 연간 생산량 1천만t 규모의 백두산 광천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 北, '물고기 대풍' 부각하며 김정은 '愛民' 선전(6/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사회주의 바다향기'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서해의 수산물 대풍은 결코 과학적 발견에 의한 기적도, 물리적 힘이나 역사의 우연에 의한 기적도 아니다"라며 "그것은 사랑의 기적"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김 제1위원장이 수산업 증산을 독려하고 올해 1월 초에는 고아와 노인들을 위한 수산사업소 건설을 지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이는 천만이 안기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칭송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6.11),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시멘트직장 등 22개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 칭호 수여(6.17, 중앙방송)
- 北 도로건설무역회사에서 개발한 내부장식용칠감들(부각장식칠감·다색무늬칠감 등)과 콘크리트 방수재·경화촉진제 등 "마감건재들" 소개(6.17, 중앙통신)
- 서해 각지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 이상의 생산실적을 기록 선전(6.18, 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 "北 탁구 지도자, 인도서 유망주 지도"(6/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청소년 탁구 대표팀 감독 출신 지도자 김성한·안종선 감독들이 인도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 유망주를 지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의약품 부족한 北, "우리 몸에는 한약" 선전(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자 '전국의 본보기 단위로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계 고려약(한약) 공장을 소개하며 고려약의 우수성을 치켜세움.
 - 신문은 2008년 공장을 방문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고려약은 우리 인민의 생활 습성과 체질적 특성에 맞을 뿐 아니라 약효가 높다"며 "이제는 유럽 사람들도 고려약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함.



- "수요 독점할 것"…北 '제빵왕' 다짐에 비친 변화像(6/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9일 '순수한 맛에 대한 고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 만경대 구역에 있는 금성식료공장을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이 공장은 평양 시민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새봄'이라는 이름의 빵을 만드는 곳으로 빵 외에도 국수나물 등 12가지 음식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밀쌈(다진 고기와 채소를 넣어 밀가루 전병으로 만든 음식)과 두부도 유명함.

- 北 "올 가뭄 2001년 이후 가장 심해"(6/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통신은 "대부분 지방에서 초봄부터 시작된 가뭄 현상은 5월 하순경에 약간 해소됐다가 여름철에 들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며 기상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2001년 이후 가장 심하게 나타난 가뭄이라고 밝힘.

- 北 신문 "죽으나사나 각오로 가뭄 피해 극복해야"(6/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0일 "온 나라가 총동원돼 가뭄 피해를 극복하고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고 독려하고 나섬.
 - 신문은 20일 3면 사설에서 신문은 "지금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모두가 죽으나 사나 올해 농사를 잘 짓겠다는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면 가뭄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 北 가뭄 극복에 비상…民軍 총동원(6/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전당, 전국, 전민이 가뭄(가뭄)과의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농촌 각지의 가뭄 극복 노력을 소개함.
 - 신문은 평안북도에서 "매일 수십만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장 포전(논밭)들에서 인민군 군인들과 힘을 합쳐 물주기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함.

- 北, 만화영화 육성 나서…시나리오 현상 공모(6/22, 문학신문;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2일 입수한 북한의 '문학신문' 최근호(6월7일)는 2015년 태양절 경축 '전국만화영화문학 현상모집' 요강을 실음.
 - 요강에 따르면 전국의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 등 각계각층이 내년 2월10일까지 장단편의 만화영화 시나리오를 '조선 426만화영화촬영소 문학창작단에 내면 된다'고 문학신문은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2014년 '국내 장애자의 날(6.18)' 연환모임, 6월 18일 김문철(장애인 보호연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6.18, 중앙통신)
 - 북한도 스페인 탈락에 '충격' 논평, "스페인 팀의 경기 결과가 세계의 다른 나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함(6.20, 중앙통신)
 - 北 선수들, '제16차 아시아청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은메달 1개·동메달 2개 획득 및 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 19일 귀환(6.19, 중앙통신)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통신 "日, 위안부 범죄 해결해야" 거듭 요구(6/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논평에서 "일본군 성 노예 범치는 일본 당국이 국가권력과 군권을 총발동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행한 특대형 범죄"라며 "일본 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며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함.
 - 또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일 압박 움직임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흐름이 이러하나 일본의 극우익 세력은 아직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과거청산을 극구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청천강호 변호인 "선원 기소, 일사부재리 위배"(6/17, 미국의소리(VOA))
 -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의 변호인이 "선적 화물 미신고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선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청천강호 선원 변호를 맡은 홀리오 베이오스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들은 숨긴 화물을 파나마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함.



- **北 노동신문 연일 '美中 갈등' 부각...왜(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중미 사이의 마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연방대배심이 지난달 중국군 간부 5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올해에 들어와 중미 사이의 대립은 더욱 표면화하고 있다"고 논평함.
 - 이어 미국이아팔로 중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으며 중국군 간부들의 기소는 미국의 피해를 부각해 "저들(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목표로 강행하는 사이버전을 정당화해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함.

- **中 "北과 군사동맹은 아냐...정상적인 왕래는 유지"(6/19, 연합뉴스)**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류 부장조리는 또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정상적인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고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중국과 북한은 여러 가지 왕래를 계속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이라크 사태 악순환 몰아온 장본인은 미국"(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이라크 사태의 "원인은 외세의 간섭으로 생겨났고 그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며 "2003년 미국이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강점한 때로부터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났다"고 주장함.

- **北외무성, '김정은 비판' 인터뷰한 호주 외교장관 비난(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가 누구든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헐뜯으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기타 (대외 일반)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옆 북한 박물관, 개관 지연(6/18,자유아시아방송(RFA))
- 동평양제1중학교에 「모택동 반」 명명(命名) 55주년 기념 친선모임, 6월 17일 서호원(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및 류홍재(駐北 중국 대사) 등 초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6.17,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6월 15일 카타르 내각 수상(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라파 알사니) 면담(6.1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화'에 2014 청도 세계원예박람회(중국 산둥성 청도시) 국제분재경쟁 특별전시상 수여(6.19, 중앙통신)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6월 18일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아사드) 내각 수상(와일 나디르 알 할키)과 각각 담화(6.19,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 한미훈련美MD체계 또 비난... "핵억제력으로 대응"(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이 땅은 1950년의 조선 반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육군과 학생화학 무기 제거를 위한 연합훈련이 감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무모한 광증"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림팩코브라 골드 등 세계 군사훈련은 재난구조 훈련을 기본으로 하지만 '키리졸브', '독수리' 등 한미 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군사적 우세로 패권주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오바마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조평통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해야"(6/1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문창극과 같은 자가 총리가 되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차례질(돌아갈) 것이란 더 큰 재앙과 수치, 불행밖에 없다"며 "박근혜가 앞날의 운명과 북남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문창극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차 대통령 겨냥 "기만적 '신뢰' 면서포 벗겨졌다"(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기만적인 신뢰의 면서포는 벗겨졌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핵포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여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보려고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과 각종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본질상 선임자들의 대결정책과 똑같은 것"이라며 "체제대결 흥심에 '신뢰'라는



화려한 면사포를 씌우고 그 교활성과 악랄성에서 선임자들을 훨씬 능가한다"고 비난함.

- 이어 통일부가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6·15 남북공동행사 참가를 불허한 것을 지적, "괴뢰들이 북남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신뢰'를 떠드는 것은 서푼 짜리 기만"이라고 덧붙임.
-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는 우리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논의한 데 대해 "외세와의 북침 공모결탁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남한 강원도 횡성 등 여러 지역에서 조류독감 확대, 6월 14일 KBS 방송 인용 보도(6.17, 중앙통신)
- 정부개각을 위한 인사개편 관련 '박OO의 정부개각은 민심에 역행하는 극악한 정치적 폭거로서 그의 파쇼독재적 대결근성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대매국파 파쇼독재, 부정부패와 동족대결책동을 답습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비난(6.18, 중앙통신)
- 우리 육군 6군단의 작전계획 시행훈련(6.13~19, 경기도 양주 일대) 실시와 정예부대의 미국훈련 참여에 대해 '미국 상전을 등에 업고 이 땅에서 북침핵전쟁을 도발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주장(6.19, 중앙통신·민주조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핵무기 감축세 주춤…北 핵탄두 6~8개 보유<SIPRI>(6/16, 연합뉴스)**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등 8개 핵보유 국가들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보다 5.6% 줄어든 1만6천300개로 집계됐으며, 북한은 현재 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음.
 - 이는 지난 2011년 핵탄두가 전년 대비 2천70개 줄어 2만530개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SIPRI는 "이와 같은 수치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완전한 핵무기 감축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음.
 - 국가별 동향을 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계 핵무기의 93%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250개), 인도(90~110개), 파키스탄(100~120개)은 오히려 핵무기를 늘린 것으로 집계됐음.

- **한러, 18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황준국 출국(6/16, 연합뉴스)**
 -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고르 마르쿨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6일 출국했으며, 황 본부장이 러시아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최근 북한과 러시아간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밀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협의에서는 러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아직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6자회담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됨.

- **IAEA "北 사찰 복귀 대비해 상시 준비체제"(6/17, 연합뉴스)**
 - 외교부는 1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제2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IAEA가 앞으로도 북핵 검증 분야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IAEA측은 2009년 4월 IAEA 사찰관의 북한 철수 이후에도 사찰 복귀에 대비한 상시적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북한의 핵 활동 동향 및 검증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 또한 핵확산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조치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며 이와 관련, 핵확산 우려국들의 의심 구매활동을 분석하는 문제에 대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6자회담 북한제의 5개국 단일 대외 와해<美전문가>(6/18, 연합뉴스)

-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 북한 문제에 각각 엇박자를 냈다고 지적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자 가운데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의 일치했던 움직임이 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음.
- 특히, 최근의 일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제재를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남북자 문제의 진전은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음.
- 또한, "역설적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북한 주변 국가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6자회담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외교관들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불가…北, 여건 만들어야(6/19,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6자회담 재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의무 위반, 약속 파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감안할 때 조건 없이 6자회담 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그는 "대화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재개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외교적 행사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무슨 진전이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으며 지속적인 '5자간 협력 공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음.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북한 비핵화 계속 압박하겠다"(6/21, 연합뉴스)

- 미 국무부의 쟈 사키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미국의 관점은 일본이 무라이야마(村山) 전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 사과를 계승하는 게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장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음.

-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고 '도발적 언동'을 자제하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 또한 "미국의 초점은 일본이 관심을 공유하는 현안에서 한국과 협력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여러 현안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中 "北과 군사동맹은 아냐...정상적인 왕래는 유지"(6/19, 연합뉴스)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17일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북간 군사동맹과 중북 동맹'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북한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부정했음.
-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에는 서로 침략을 받을 때 군사적 자동개입조항이 들어 있으나 사실상 이 조항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 왔으며 류 부장조리의 언급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됨.
-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고 밝혔으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핵 보유에 반대한다"고 밝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중국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라. 일북 관계

● 남북일본인 재조사 임박...이르면 금주 조사위 발족(6/16,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6일, 북한과 일본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자급 협의를 열었다고 전했으며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 이달 19일 전후로 북한 측의 재조사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음.
- 재조사 관련해 북한 측이 설치 예정인 특별조사위원회에 닛케이는 국가안전보위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등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 봤지만 도쿄신문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음.
- 한편 북한과 일본은 송일호 국교정상화교섭담당 대사와 이하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심으로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협에서 일본은 재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북제재 해제 범위에 관해 북한과 최종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日 납치문제담당장관 "납북자 귀국해야 총리 방북 가능"(6/17,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담당장관이 "정상회담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모든 납치피해자가 귀국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총리 방북의)대전제"라 말했다고 보도했음.
 - 그는 "납치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일본인이 최대 860여명에 이른다"고 말하며 모든 일본인 납치자를 돌려받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설명했다. "알북 평양선언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이 북한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알북 합의로 미국과의 대북 공조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알북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 등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이번 협의와 관련된 상황도 사전사후 두 나라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 **일본 관방장관 "조만간 북일 국장급협의를"(6/18,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북한과 일본은 가까운 시기에 정부간 협의를 한다고 밝히며 협의가 열리면 북한의 납치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책임자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음.
 - 스가 관방장관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가진 기관일 것"이라며 사실상 조사위원회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직할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식을 드러냈음.
 - 일본 정부는 알북 협의를 거쳐 설치에 합의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개시 시점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 회의를 열어 인적왕래 금지 등 대북독자 제재의 일부를 합의한 대로 해제할 전망이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전작권 고위급 회의... '킬체인KAMD' 구축 점검(6/16, 연합뉴스)**
 -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음.
 - 또한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20년대 초반에 구축



될 예정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으며, 이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결정할 때 중요 고려요소가 될 전망이다.

- 이번 전작권 관련 고위급 회의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SCM 때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매달 개최될 예정이다.

● 워싱턴서 韓로비 세졌다...日 대미영향력 약화(6/17, 연합뉴스)

- 미국의 아시아전문가인 켄트 콜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국제정치외교의 중심무대인 워싱턴에서 한국의 로비력은 크게 강화된 반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활발하던 일본의 대미 영향력은 감퇴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음.
- 특히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의회 통과 ▲독도 영유권 문제 ▲무비자 협정 체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면서 "한국대사관과 NGO들 간에 복잡하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 또한 미 법무부 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토대로 2001년~2012년까지의 로비비용 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천만 달러 수준에서 4천만 달러대 중반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4천만 달러대 중반에서 2천만 달러대 후반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음.

● 리퍼트 주한美대사 지명자 "한미관계 역대 최강"(6/18,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한국 국민과 문화를 존경하게 됐다"고 밝히며 "한미관계가 지금보다 강한 적은 없었고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음.
- 리퍼트 지명자는 "국방부 아태차관보로 일할 때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령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韓美 원자력협상 연내 타결 목표...협정문안 조율(6/19,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 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소규모 집중협의를 통해 남은 쟁점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협정문안과 관련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음.



- 이는 그동안 물밑 진행돼온 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거뒀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원자력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규모를 감안해볼 때 과거보다 격상된 '전략적 협력' 방안이 협정 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양국 간에 여전히 의견차이가 있다"며 "원자력협정의 만기는 2016년 3월이지만 미국의 중간선거와 새로운 원 구성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 3년만에 비공개로 재개(6/17,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은 17일,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현재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관련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해왔으나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2009년 이후부터는 활성화되지 않았음.
- 해양경계 획정 기준과 관련,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진핑 방한, 한중관계대북협력에 '이정표'(6/19,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 달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한중 양자관계의 발전과 양국 간 대북 협력 등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시 주석은 이번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방안과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방안,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로도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와 내포한 뜻이 적지 않은데, 과거에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 '혈맹'으로도 불렸던 북한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중관계와 중북관계, 한반도 정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황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면서 중국의 '한국 중시' 분위기가 이번 시 주석의 방문 순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음.



다. 한일 관계

- **조세영 "고노담화 발표 전에 일본이 의논 요청"(6/17, 연합뉴스)**
 - 고노담화 작성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역사 관련 시안을 담당했고 후에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 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17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일본이 먼저 한국에 의논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 그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로부터 '일본 측이 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안다. 나중에 조율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걱정도 알지만 내밀하게 의논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음.
 - 산케이신문은 고노담화 발표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사전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양국 정부가 담화의 문구와 표현까지 '면밀하게 조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정부, 日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 국제무대에서 정면 비판(6/19, 연합뉴스)**
 -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고노(河野)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 대신 역사적 사실은 물론 책임까지 부인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특히 "지난 1993년 나온 고노담화는 그나마 일본이 처음으로 일본군이 군위안부 강제동원에 개입했고 이에 사과를 한 성명"이라고 환기한 다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그 책임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 미국과의 양자 조약을 통해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일본은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도가 없으며, 아시아 여성기금과 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 **日, 독도 주변해역 우리군 사격훈련 중단요구...정부, 일축(6/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9일, 우리 해군이 20일 동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해역에 독도 주변의 자신들 영해가 포함됐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훈련 중지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해상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상사격훈련으로, 훈련구역의 대부분은 공해상이며 끝부분 일부가 독도 인근 12해리 이내와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구역은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왔던 곳"이라며 "이 구역 일부가 일본 영해에 포함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강조했고, 한편 우리 군은 지난달 30일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한국과 고노담화 문안조정"…한국 "깊은 유감"(6/20,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은 고노담화 검증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 검증 결과의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일 간의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며, 검증 보고서 내용으로 미뤄 담화가 한일 양국의 조율을 거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검증결과가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음.
 -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깊은 유감' 표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 마중 관계

- **중국군인, 美 항공모함 승선해 참관(中언론)(6/17, 연합뉴스)**
 -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지인 참고소식(參考消息)은 외신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인 가운데 미국 해군이 홍콩 정박을 앞두고 있던 '조지워싱턴'호에 중국 인민해방군 4명을 초대했다고 17일 보도했다.
 - 마크 몽고메리 항모전단장(해군 소장)은 "미중간 군사관계는 최근 6개월간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중국군 당국이 중국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에 초대한다면 양국 군사관계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동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는 중국은 미국이 관련 국가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데에 불만을 표출해 왔으나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군을 항모에 초대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양국 군사관계와 교류에 큰 문제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됨.

마. 마일 관계

- **아베 집단자위권 핵심사례, 美 거부한 계획(아사히)(6/1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제시한 핵심 사례에 대해 미국이 1990년대에 이미 수용 불가의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 1997년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란 일본인을 미군이 실어 나르는 비전투원구출작전(NEO)을 미일 방



위협력지침 개정시 추가하려고 했지만 1998년 당시 미국의 뜻에 따라 결국 NEO를 제외했음.

- 아베 총리는 지난달 15일, 집단자위권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헌법 해석과 방위체계로는 유사시에 피신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군 함선이 일본 근처에서 공격받더라도 자위대가 이를 보호할 수 없다고 예를 들며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바. 마러 관계

● 美,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평화안 수용" 압박(6/21,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에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며,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무장세력에 군사적 지원을 하려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
- 세르게이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언론에 "이번 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진압해 (친러시아 성향) 민간인과 정부군을 분리하는 장벽을 칠 것"이라 말한 바 있으며,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장악한 분리주의 지도자 7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음.
- 한편 미국과 EU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등을 상대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러시아를 압박했는데, 이와 관련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면서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일본, 잃어버린 역사인식 되찾으라"(6/16,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아베 정권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잃어버린 역사인식을 되찾으라"며 강하게 비판했음.
- 화 대변인은 일본을 '도끼를 잃어버린 뒤 이웃을 의심한 사람'의 우화에 빗대어 비판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 자기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이웃국가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인지 ▲ 시대조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꼬집었음.
- 또한 "일본은 소위 '중국 위협론'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 목적은 헌법 수정과 군비확장을 위한 핑계거리"라 말했으며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든지 간에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음.



아. 중러 관계

● 중국서 푸틴 어록 묶음 '푸틴 문집' 출간(6/19, 연합뉴스)

- 홍콩 명보(明報)는 19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푸틴 대통령의 각종 연설과 기자와의 문답 내용, 연두 교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푸틴 문집(2012~2014)'이 중국에서 발간됐으며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책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음.
- 중국에서 외국 지도자의 자서전이나 회고록 등이 출간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런 식의 어록집은 흔치 않은 일로,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이 문집은 매우 정교한 공예품"이라 칭찬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외국 지도자의 책이 해당 국가에서 먼저 출판된 뒤 중국에서 번역 출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발간된 문집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펴낸 것으로, 이런 식의 특급 대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자. 기타

● 집단자위권 자문기구 대표 "韓中 충분히 설득 가능"(6/17, 연합뉴스)

-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國際)대 총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일동맹 세미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에 부정적인 한국과 중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그는 "한국 전문가들이 집단자위권 추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에 조용하고 끈기있는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경우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영토, 영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음.
-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일본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서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만 지적하지 집단적자위권 자체의 추진에 대한 지적은 없다"고 밝혔음.

● 중국, 아무리 강해도 해양패권 추구안해<中보고서>(6/18, 연합뉴스)

- 중국 군사과학원 국방정책연구센터는 18일 발표한 '전략평가 2013'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발전과 국제 안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해군이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중국 해군은 확장이 아닌 방어적 군사전략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려면 해상 권력과 해상 역량 발전이 필연적이라며 이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가 받



전하는데 기회가 될 것이라 주장했음.

- 또한 아태 지역은 두 차례 세계 대전이라는 재난을 경험했고 이는 복잡한 역사 문제를 초래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아태 재균형 전략을 쓰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자극해 갈등이 심화하고 적대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불법 돈벌이 행위 강력단속(6/18, 자유아시아방송)

- 돈벌이를 위한 기업형의 활동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주민들의 불법적인 돈벌이 행위를 모조리 없앨 데 대해 지시했으나, 건데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의 반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국가의 '전문교육으로 배운 기술을 불법적인 돈벌이에 악용하지 말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내린 지시문이 간부강연회에서 전달됐다"고 전함.
- 이달 초, 간부강연회에서 전달됐다는 이 지시문에는 "국가가 배워준 기술을 악용해 불법적인 돈벌이 집단을 형성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불법적인 돈벌이 집단은 모조리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는 경고도 포함 되어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개인들이 3~4명씩 합작해 오토바이 전문 수리점을 한다든지, 중고 냉동기나 텔레비존(TV)과 같은 것을 고쳐서 파는 수리소들이 최근 몇 년 새에 많이 생겨났다"고 전했으며, 노트북(노트북)을 몇 대씩 차려놓고 정전이 돼도 배터리를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오락실'을 차린 가정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전함.
- 한편 북한 당국은 지시가 내린 후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터(사업장)들을 모조리 폐쇄하고 있으나, '1118상무'가 오토바이 수리소나 여인숙을 운영하던 주민들을 체포해 가고, 개인들의 창고까지 모두 폐쇄해 당장 생계를 이어 갈 길이 막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북, 장교들 군대물자 빼돌리기 엄단(6/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장교들의 후방물자 빼돌리기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 할 데 대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가 연일 하달되면서 "최근 병사들의 밥 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반찬거리도 여러 가지로 늘었다"고 복수의 북한군 소식통들이 전함.
- 소식통들은 "최룡해가 인민군 총정치국장 자리에서 밀려난 것도 군인들의 식생활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 양강도의 한 국경경비대 군인은 "김정은이 새로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된 황병서에게 '이제부터 영양실조환자가 발생한 부대 지휘관들은 무조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이런 지시들이 내린 후 인민무력부에서 매주 '영양식사포(메뉴)'가 내려 오고 있다며 여단 정치부에서도 수시로 내려와 군인들의 밥 량과 반찬



거리들을 조사해 예전처럼 군관(장교)들이 병사들의 후방물자를 빼돌리지 못하고 있음.

- 후방물자 통제가 강화되면서 요즘 들어 군인들의 밥 량이 크게 늘고 무엇보다 물고기와 두부, 콩나물을 비롯해 끼마다 세 가지 이상의 반찬이 오르고 있는데 반찬의 량과 질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라는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를 잘 알지 못하는 병사들은 식생활 개선을 황병서 신임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공으로 인식하고 있어 황병서의 인기만 끌어 올리는 형편임.

● 북 주민들 보위부 '정보정치'에 입조심(6/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보위부가 외부정보의 북한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보망을 대대적으로 가동시켰으며, 감시가 삼엄해 사람들은 외부 소식을 아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음.
- 최근 자강도 국경지방에 나온 강계시의 한 공무원은 "최근 보위부가 정보원들을 동원해 외부 소식을 발설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 들어 정보정치, 공포정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힘.
-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는다는 이 공무원은 "요즘 월드컵에 출전한 외국 선수들 이름을 부르는 자체도 겁난다"며 "누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항상 조심스럽다"고 말했음.
- 예전에 몰래 한국 드라마를 나눠보던 사람들도 드라마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드라마 광'으로 알려졌던 일부 간부 자녀들도 잔뜩 움츠린 분위기라고 함.
- 김정은 정권의 절대적 비호아래 기세가 오른 보위부가 국경통제와 탈북방지, 내부 정화 등 반체제 요소를 색출하기 위해 정보정치, 공포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최근 한국과의 전화통화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북한방송은 양강도 주민의 말을 인용해 밀수는 6개월 노동교화형에서 2년으로 늘었고, 남한과의 통화는 최대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개정됐다고 전함.
- 소식통은 북한이 한류 확산과 주민 탈출을 막기 위해 국경단속에 매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자, 형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함.
- 남포시의 또 다른 상인도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더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며 북한 주민들은 이를 '둘째 며느리 맞아봐야 맘머느리 좋은 줄 안다'는 말로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를 은유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북한인권

- "북한인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실상 불가능"(6/17, 아시아경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회의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을 주제로 17일 오후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됨.
 - 회의에서 국립외교원 조정현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 재판소에서 재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음.
 -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법적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통일연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대폭 감소"(6/18, 연합뉴스)
 - 통일연구원은 18일 발간한 '2014 북한인권백서'에서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자 237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모두 5곳이며 수감자는 8만~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음.
 - 이는 기존 수감자 추정치인 15만~20만 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임.
 - 연구원은 북한의 기존 정치범수용소 6곳 가운데 함경북도 회령시 '22호 관리소'의 폐쇄로 현재는 모두 5곳이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음.
 - 평안남도 북창군의 '18호 관리소'는 평안북도 개천시 동림리로 이전했으며 수용 인원도 2009년 추정치인 1만 9천 명에서 2천~5천 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었음.
 - 연구원은 "북한의 수용소 수와 규모가 축소됐지만, 북한 당국의 정치범수용소 정책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중요한 점은 김정은 시대에도 정치범수용소가 존속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엔인권이사회, 중국에 탈북 여성 보호 권고(6/18, 미국의 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중국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함.
 - 실무그룹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방중
 - 보고서는 중국의 여성차별 철폐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강제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음.
 - 또한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의료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또 많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복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음.
- 중국 당국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신한 탈북 여성들을 중국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대신,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에 낙태를 제의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함.
- 특히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고했음.

● 킹 특사, 유럽연합 외교관리들과 북한 인권 논의(6/18, 미국의 소리)

-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유럽연합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EEAS) 관리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17일 밝혔음.
- 킹 특사는 16일 브뤼셀에서 유럽대외관계청의 안네트 맨들러 인권, 민주주의 국장 대행과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등과 회동
- 이어 17일 각국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북한 인권인도주의 사안들을 논의했으며, 18일 제네바로 건너가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임.
-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19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계획임.

● 北인권특별보고관 "국제사회, 北인권상황 개선 책임"(6/19, 연합뉴스)

- 마루스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관련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서 유엔과 인권이사회 회원국,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권유린의 책임을 규명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지난달 유엔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가해 여성에 대한 폭력 중단과 식량보급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개혁을 하겠다면서 81개 권고안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다"면서 "이는 COI보고서의 영향이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현장조사 사무소(Field-based structure) 유치를 큰 진전으로 평가하며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던 사실도 보고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COI보고서가 북한의 주요 인권침해자로 북한의



보위국과 인민군, 사법기관, 노동당 등에 소속된 간부들을 지목한 만큼 국제사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기초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
-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별대사는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약속했으며, 영국 대표는 한국의 북한인권조사 현장사무소 지원 방법을 물어봄.
- 한국의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도 "COI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이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도 이런 차원에서 OHCHR의 북한인권조사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두기로 했다"고 강조함.
- 그러나 북한 서세평 대사는 "이 보고서는 적대적 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며, 북한을 ICC에 회부한다는 제안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도발"이라며 반발했음.
- 중국과 베네수엘라 대표도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형태의 인권보고서를 반대한다"거나 "이중적 기준에 의한 보고서를 반대한다"고 표명했음.

● <인터뷰> 다루스만 "北인권 주시할 콘택트그룹 구성"(6/19, 연합뉴스)

- 마루스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인권관련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회기에도 계속 북한 인권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구성된 북한인권 콘택트 그룹'(Human rights contact group)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콘택트 그룹은 10개 회원국 이하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 설치되는 북한인권조사 현장사무소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 하에 올 가을 이전, 반드시 서울이 아니더라도 증거수집 활동을 위해 편리한 위치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인권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앞으로의 협조도 기대한다고 표명함.

● "北서 '핵시설 안전사고' 발생가능성"(6/19, 연합뉴스)

-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 국제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Africa, Global Health, Glob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18일(현지시간) 개최한 북한인권 청문회(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에서 북한 당국이 핵관련 시설 근무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함.
- 신 연구위원은 영변 핵시설에서 일했다는 탈북자를 면담한 결과 "북한



정권이 핵시설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지급하지만 근로조건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신 연구위원은 "금광에서 일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평산의 우리나라 광산에서 일한 탈북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이정훈 인권대사는 국제 비영리단체 '휴먼 리버티'의 위임을 받아 영국의 법률회사 '호건 로벨스'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특히 북한 정권이 '적대계층,' '기독교,' '혼혈인' 등에 대해 학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INK)의 앤드루 낫시오스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전체주의 구조가 대기근이나 북한 정권의 정치·경제적 개혁 거부 등으로 인해 천천히 부식되고 있다"고 분석함.
- 이어 "미국 정부가 가능한 모든 토론회나 북한과의 직접 대화 등의 수단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함.

● 미국 국무부, 12년째 '북한 인신매매 최악국' 지정(6/2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Tier 3) 국가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은 2003년 이후 12년째 최악 등급에 머무르고 있음.
-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면서 "8만~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 놓고 있다"고 전했다.
- 또 북한 당국이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몽골 등의 국가와 계약해 노동자들을 내보내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가 하면 월급을 당국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불법 입국했으나,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노동 등을 강요받거나,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 산업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하며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노역, 사형 등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음.

3. 탈북자

● 남북하나재단, 7~8월 탈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6/18, 이데일리)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은 오는 7~8월 두 달간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교육, 취업, 주거, 생활, 의료지원 현황 등 생활실태를 조사할 예정임.



- 이번 실태조사는 재단 소속 전문 상담사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면접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에 실시된다"며 "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 유엔난민기구 '전 세계 탈북 난민 1천166 명'(6/21, 미국의 소리)

-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살고 있는 탈북자가 모두 1,100명을 넘음.
- UNHCR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받거나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탈북자 수가 1,166명이라고 밝혀,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1,100 명) 보다 56명 증가함.
- 보고서는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도(490명) 보다 약 2배 가량 늘어난 952명이라고 밝혔음.
-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들을 모두 합하면 2,118명으로, 전년도보다 528명 증가함.
- 하지만 이 통계는 한국에 정착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 받은 탈북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됨.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日 "북한, 금주 내 납치문제 조사위 설치"(6/16, 데일리NK)

-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16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이번 주 내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이 조사위 구성에 직접 나섰다 이후 직할 조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조사위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최고인민회의 위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힘.
- 지난달 29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와 일본의 대



북 제재를 해제 합의에서 일본은 북한이 '3주 이내' 즉, 오는 19일까지 조사위를 개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향후 북한과 일본은 가까운 시일 내 외무성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후 진행되는 상황과 대북 제재안 해제 수위에 대해 주되게 논의할 예정임.

● **日 납치문제담당상 "납북자 귀국해야 총리 방북 가능"(6/17, 연합뉴스)**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이 모든 납북 일본인들이 귀국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후루야 담당상은 이날 VOA와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막판에, 끝에 가서 하는 것이고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총리 방북의) 대전제"라고 언급함.
- 그는 모든 일본인 납치자를 돌려받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본 경찰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납치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일본인은 최대 86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이어 북한이 이번 주 내로 납치문제 해결 관련 모든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현 단계에서 조각구성책임자 등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곧 통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함.

● **KAL기 납북 가족회, 통일부에 재차 訪北 신청(6/17, 데일리NK)**

-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17일 서울종합청사 통일부 앞에서 납치피해자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하고 납치된 부친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방북신청 함.
- 이날은 가족회가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반(WGEID)'에 황인철 대표 부친 황원(납치당시 32세, MBC PD) 씨의 'KAL기 납북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지 4년이 되는 날임.
- 황 대표는 지난 2월에도 통일부에 "조선(북한) 적십자사를 찾아 부친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방북신청을 했으나 불허됐음.
-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황 대표의 방북 신청을 작성을 도와주면서 "방북을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북한이 보낸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황 대표는 "아버지를 납치한 북한이 가장 나쁘지만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화가 난다"며 "방북신청을 하면 통일부가 북한에게 '납북자 가족들이 방북을 요청한다. 생사확인이라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통일부는 그저 나에게 방북신청이 안됐다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고 토로했음.
- 앞으로 황 대표는 이번 방북신청도 불허된다면 통일부 장관 면담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위헌 소송까지 계획 중이라고 밝힘.

● **日외무상 "납북 특별조사위, 통지방식 조정 중"(6/18,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납북 일본인 재조사를 위해 북



한이 구성 중인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 통보할지를 조정 중"이라고 언급했음.

- 18일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일본에 "조직, 구성, 책임자를 통보하게 돼 있다"고 설명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측 책임자를 만나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 관방장관 "조만간 북일 국장급협약"(6/18,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은 가까운 시기에 정부 간 협의를 한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8일 밝힘.
-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소개한 뒤 협약이 열리면 북한의 납치 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책임자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음.
-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협약에 나서며, 시기와 장소는 베이징의 양국 대사관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부연함.
- 스가 장관은 '조사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가진 기관일 것"이라며 사실상 조사위원회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직할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식을 표명함.
- 일본 정부는 북일협약을 거쳐 파악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개시 시점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 회의를 열어 인적왕래 금지 등 대북독자 제재의 일부를 합의한 대로 해제할 전망이다.

● **일본 대법원, 조선총련 건물 매각 절차 정지시켜(6/20,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낙찰받은 일본 부동산 회사의 매각 허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고 보도함.
- 최고재판소는 조선총련이 1억 엔(10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9일 이례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음.
-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16일 조선총련이 도쿄고등재판소(고법)의 경매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특별항고를 심리해 왔음.
- 북한 측은 지난달 일본과 납북자 재조사 등에 합의하면서 "총련 건물 매각 문제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6. 국군포로

- 625 국군포로가족회, 유해 보상·전사일자 정정 요구(6/16, 뉴시스)
 -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국군포로의 탈북 2세 가족들이 16일 국군포로 유해에 대한 보상과 전사일자 정정을 요구함.
 - 6·25 국군포로가족회는 6·25 참전 국군포로 명예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국군포로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도 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유해 발굴도 국군포로 2세들이 스스로 해야 했다"고 주장함.
 - 이어 "정부는 북한에서 전사한 국군포로도 참전유공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며 "국군포로 유해에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전사일자를 6·25가 아닌 북한에서 사망한 날짜로 고쳐라"라고 촉구했음.
 - 국군포로 2세인 탈북자 한영복씨는 "국군포로의 보상 문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계속 버티는 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는 탈북자를 무시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음.

- '北서 사망 국군포로' 유해송환 비용 유족에 지급추진(6/17, 연합뉴스)
 -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유족이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숨진 뒤 유족들이 그 유해를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송환 과정에서 든 비용을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곧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유해 개념(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 유해 송환시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 송환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송환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위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합한 금액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국군포로 손동식씨의 유골이 국내로 송환된 후 유족들이 송환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대부분 80세를 넘는 고령이어서 탈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사망한 뒤 유골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사례에 대비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국방부 간부, 국군포로 유가족에 폭언 논란(6/17, YTN)
 - 국방부 간부가 국군포로의 유해를 송환한 유가족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음.
 - 국방부 A 과장은 지난 3월, 국군포로 손동식 씨의 딸에게, "북한에서



- 편히 쉬고 계신 분을 유가족 뜻대로 베란다에 모셔왔다"며,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정권에 왜 항의하지 않느냐"는 모바일 메시지를 남겼음.
- 또한 "당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진심을 알려주지 않고 유가족이 막 나간다"고 강조했음.
 - 이와 관련해 해당 국방부 간부는 유가족이 평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 데다, 그 날은 잠자는 새벽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와 흥분한 상태에서 응대한 것이라고 말했음.
 - 유가족과 국방부는 손 씨의 무공훈장 수여와 송환비용 지급을 둘러싸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현재 손 씨의 유해는 현충원이 아닌 유가족 아파트 베란다에 놓여 있는 상황임.

7. 대북지원

- **연천군-獨 한스자이텔재단 대북 조림사업 협력 MOU(6/17, 연합뉴스)**
 - 경기도 연천군은 17일 독일의 한스자이텔재단과 대북 조림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대북 조림사업은 북한 산림 황폐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고 북에서 연천군으로 흘러오는 임진강 수계의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임진강 수계, 연천군과 접한 북측 지역을 조림대상 지역으로 함.
 - MOU 체결에 따라 연천군은 조림사업에 필요한 묘목과 자재를 제공하고, 한스자이텔재단은 북한 현지 사업진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됨.
 - 남북관계 기류 변화에 따라 연천군 관계자가 직접 북한 현지를 방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천군은 올해 들어 북한에 묘목을 지원하기 위한 양묘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해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77~78 일원 부지에 1만3천223㎡(4천평) 규모의 대북지원형 묘목 증식원을 조성하고 있음.
 - 오는 2020년까지 군(郡) 남북협력기금 50억원을 적립해 사업에 활용할 계획임.
- **WFP, 대북식량지원 30% 축소(6/18,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이 국제사회 모금 부진으로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양지원 사업의 규모를 약 30% 축소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간 북한의 취약계층 약 240만 명에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하는 2억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지원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입수한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자금 보고서'를 보면, 북한 지원 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은 1억 3천750만 달러로 지난달까지의 전체 예산 2억 달러에서 약 6천250만 달러 감소함.



-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 모금이 부진해 대북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음.
- 대북지원계획 변경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임.
- 이사회에 보고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만성식량부족 상황을 '잊혀진 비상사태'로 표현하며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음.

8. 북한동향

- 국제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를 규탄하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그 무엇으로써도 과거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위안부는 일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이며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6.16, 중앙통신 논평/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